
1910년대 대전의 일본인 사회 동향과 『조선대전발전지(朝鮮大田發展誌)』 편찬

이성우 (충남대학교, 강사)

〈목 차〉

- I. 머리말
- II.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대전거류민회
- III. 『조선대전발전지』 편찬배경과 목적
- IV. 『조선대전발전지』의 구성과 성격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대전발전지』는 1917년 일본인 다나카 이치노스케가 편찬한 대전지방지이며 한말 1910년대 대전의 일본인 사회 동향과 도시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대전에는 1904년부터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자치기구를 조직했으나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자치조직이 해산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조선대전발전지』를 편찬했다.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연대의식·공동체의식·지역담론의 형성을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충남도청 대전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대전발전지』는 식민지근대화론 관점에서 대전의 일본인 역사를 정리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주제어: 대전, 대전거류민사, 대전거류민회, 대전면, 조선대전발전지, 충남도청

I. 머리말

『조선대전발전지(朝鮮大田發展誌)』는 1917년 12월 일본인 다나카 이치노스케(田中市之助)가 편찬한 대전지방지(大田地方誌)이다.¹ 『조선대전발전지』는 다나카 레이스이(田中麗水)가 편찬한 『대전발전지(大田發展誌)』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다나카 이치노스케가 필명(筆名)으로 다나카 레이스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조선대전발전지』에도 편자는 다나카 레이스이이나 판권에는 본명인 다나카 이치노스케로 표기했다.² 『조선대전발전지』는 일제강점기 편찬된 지방지(地方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조선대전발전지』가 주목되는 이유는 1910년대 대전지역 일본인 사회 동향과 대전의 도시 형성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³

대전에서는 1912년 3월 『조선대전일반(朝鮮大田一斑)』이 편찬된 바 있다. 『조선대전일반』은 고바야시 로쿠사부로(小林六三郎)가 편찬한 것으로 6장 83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쇄소는 성생당(盛生堂)이었다.⁴ 『조선대전일반』은 발행사실은 확인되나 소장처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인 사쿠라이 요시유키(櫻井義之)가 편찬한 『조선연구문헌지(朝鮮研究文獻誌)』에 『조선대전일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이 『조선대전일반』인 것으로 보아 「대전일반(大田一斑)」·「대전읍세일반(大田邑勢一斑)」 등과 같이 절첩식 홍보물이거나 팜플렛 형식의 간단한 지지자료(地誌資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연구문헌지』에는 『조선대전일반』의 서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에 「대전의 과

1. 田中市之助, 『朝鮮大田發展誌』, 瞬報社, 1917.

2. 田中市之助는 『조선대전발전지』 외에도 여러 편의 저서를 남겼는데 본명인 다나카 이치노스케(田中市之助) 외에도 필명인 다나카 레이스이(田中麗水)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발전지』는 『朝鮮大田發展誌』의 책名에서 조선을 생략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대전발전지』로 표기했으며 편자를 본명인 田中市之助로 표기하였다.

3. 본고에서는 '大田·大田郡·大田面'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大田郡은 1914년 일제의 郡面廢合에 의해 신설되었고 현재 대전광역시 영역인 12개면(구죽·기성·내남·대전·동·북·산내·외남·유성·유천·진잠·탄동면)을 관할하게 되었다(송인협, 『일제강점기 대전지방 행정구역 변천』, 『대전문화』 18, 대전시사편찬위원회, 2009, 211쪽). 그런데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면을 서술대상으로 했으며 대전군과 대전면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대전은 '대전면'을 의미하며, 1931년과 1935년 이후는 대전읍과 대전부의 개념을 포함한다. 대전군 지역은 '대전군·대전지역'으로 서술하였다.

4.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 書物同好會, 1941, 401~402쪽.

거, 현재, 장래에 관한 내용을 망라해 편찬했으며 (중략) 20여일 동안 교정을 보았음에도 문장이 졸렬한 것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⁵ 『조선대전일반』은 국판(菊版)으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차의 구성도 지방지 형식을 따르고 있다.⁶ 무엇보다도 편찬자 사쿠라이 요시유키가 『조선대전일반』을 지방지(地方誌)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조선대전일반』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편찬한 대전지역 최초의 지방지이며 『조선대전발전지』는 두 번째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독립운동을 제외하면 도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전이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고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신흥도시로 성장했다는 점과 한말 일제강점기 분야별 연구들이 진행되었다.⁷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동향은 충남도청 대전이전과 관련된 연구에서 진행되었다.⁸ 이들 연구는 도청이전의 전개과정과 결과 등 많은 사실을 밝혔으며, 도청유치와 도청이전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전지역 일본인 사회의 동향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도청이 이전되는 1932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말 1910년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충남도청 이전 후 대전의 변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마찬가지다.⁹

한말 일제강점 초기 대전거주 일본인의 동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송규진은 대전에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로비할

5. 위의 책, 401쪽.

6. 『조선대전일반』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第一章 大田の地勢·沿革外 十七項, 第二章 金融の狀況外 十五項, 第三章 工業の狀況外 十五項, 第四章 農業の狀況外 十五項, 第五章 商業の狀況外 十一項, 第六章 過去の大田外 十一項 大田寫眞其他.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 402쪽)

7. 김형국, 「일제식민지배와 대전」, 『대전100년사』, 대전광역시, 2002; 정내수, 「대전의 도시발전」, 『대전100년사』, 대전광역시, 2002; 송인협, 「일제강점기 대전지방 행정구역 변천」, 『대전문화』 18, 대전시사편찬위원회, 2009; 대전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대전의 역사의 爭點과 史實』 (하권), 2019(『대전의 역사의 쟁점과 사실』 (하권)에서 근대 대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운동사 제외). 근대대전의 기원(도면회)·대전의 경제활동(최장문)·대전의 도시화와 팽창(최준하)·일제강점기 대전의 행정 중심화(송규진)

8. 손정목, 「日帝下 忠南道廳의 大田移轉과 結果」,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私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지수걸, 「도청의 설립과 이전」, 『충청남도지』 9,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8; 김나아, 「1930~1931년 대전기성회의 충남도청 유치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9. 송규진, 「일제강점기 충남도청 유치 이후 대전발전의 한계」, 『한국사학보』 74, 고려사학회, 2019.

동을 벌였고, 이것이 대전이 신흥도시로 성장하는 요인이었음을 밝혔다.¹⁰ 그의 연구는 한말 일제강점 초기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활동과 도시형성 과정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고윤수는 대전이 신흥도시로 성장하는 동력을 일본인들의 자치기구와 자본력으로 보았다.¹¹ 그의 연구는 쓰지긴노스케(辻謙之助)라는 일본인의 사례를 통해 일본인사회를 파악했으며, 대전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규명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의존적 관계라는 측면은 도청이전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1904년부터 193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본인사회의 동향을 고증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밖에 유성온천 개발과정에서 일본인의 역할과 유성온천과 배후도시 대전의 변화, 대전소방조의 활동, 일제강점기 한국인 유지들의 등장과정과 변화양상을 규명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¹²

이러한 연구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자료가 『조선대전발전지』이다. 『조선대전발전지』는 한말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활동과 도시형성 등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대전발전지』는 일제강점기 대전지방지로 사료적 가치가 있다. 1910년대 자료가 빈약한 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조선대전발전지』는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선대전발전지』는 단순히 대전을 홍보하기 위해 편찬된 것만은 아니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대전발전의 주체가 일본인임을 증명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1910년대 대전의 일본인 사회 동향과 『조선대전발전지』 편찬배경과 목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대전발전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대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송규진, 「일제강점 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108,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11. 고윤수, 「在朝日本人 쓰지긴노스케(辻謙之助)를 통해서 본 일제하 대전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 대전」, 『서강인문논총』 5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12. 고윤수, 「일제하 유성온천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고윤수, 「일제하 大田의 한국인 有志들의 등장과 변화」, 『역사와 담론』 91, 호서사학회, 2019; 김상욱, 「일제강점기 1910~1939년 대전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II.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대전거류민회

대전은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고 대전역이 설치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충남지역 문화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강이었다. 금강의 뱃길은 강경-공주-부강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중심이었고, 공주는 감영소재지로 충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부선과 호남선철도가 개통되면서 감영이 있던 공주의 기능은 약화되고 강경·논산·대전·조치원 등이 근대도시로 부상했다. 일제는 대륙침략과 식민지수탈을 위해 X자형 철도망을 건설해 지배기반을 구축했고, 대전이 근대도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이다.

조선시대 대전지역의 중심은 회덕현(懷德縣)과 진잠현(鎭岑縣)으로 현재 대덕구 읍내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대였다. 충청도는 1896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충청남북도로 분리되고, 대전지역은 회덕군과 진잠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군면폐합(郡面廢合)에 의해 회덕군과 진잠군 전체와 공주군 일부를 편입해 대전군이 신설되었다. 대전군이 신설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인동·원동·중동·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면(大田面)도 신설되었다. 대전면은 1917년 지정면(指定面)이 되었고 1931년 대전읍(大田邑), 1935년 대전부(大田府)로 개편되었다.¹³ 대전은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이 아닌 지역이 일제강점기 중심지로 부상한 도시이다.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자 다나카 이치노스케가 “조선에서 일본인들만이 모여 살고 지명이 생겨 일본사람만으로 건설한 도시는 유일하게 대전뿐이다. 건설을 시작한지 겨우 30년에 오늘날처럼 대전이 발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참으로 신홍대전이라고 할 만 하다”라고 한 것도 이를 말한 것이다.¹⁴

대전에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철도부설과 관련이 있다. 경부선 철도부설에 참여한 일본인들이 대전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철도경비

13. 송인협, 「일제강점기 대전지방 행정구역 변천」, 『대전문화』 18, 대전시사편찬위원회, 2009, 214~215쪽, 220쪽. 일제강점기 대전의 행정구역 개편은 송인협 논문 참조.

14.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二) 大田の地名と基因」, 『釜山日報』, 1932.10.22.

를 위해 일본군 수비대가 들어오고, 점차 대전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1904년 철도공사 관계자 188명이 대전에 거주하기 시작해 1910년에는 3,8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현재 대전역 주변에 일본인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¹⁵ 일본인들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군청을 조선인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던 회덕(현재의 읍내동)에서 대전리(현재의 원동)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인들은 군청이 멀어 불편하니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전으로 군청을 옮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일제는 한일강제병탄 후인 1910년 12월 일본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청을 대전리로 이전했다.¹⁶ 조선의 전통적 질서와 문화가 남아있는 회덕보다는 새롭게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대전이 식민지배 체제를 확립하는데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¹⁷ 이는 역사적 전통과 지역주민의 의사는 상관없이 행정조치가 일본인 편의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전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1910년대 대전군의 중심은 대전면이었다. 대전면은 대전역 주변의 일본인 거주지를 행정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¹⁸ 일제의 군면폐합 기준은 군(郡)이 40방리(方里) 인구 1만명, 면(面)이 4방리 800호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군면폐합 당시 1방리 미만의 소면(小面)이 38개에 이르렀는데 대전면은 0.082방리로 충북 청주면(0.053방리) 다음으로 가장 작은 면이었다.¹⁹ 군면폐합 기준은 기준

15. 송규진, 「일제강점 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04쪽. 한일강제병탄 전 대전의 일본인수는 다음과 같다. 188명(1904년)·609명(1905년)·720명(1906년)·1,287명(1907년)·1,852명(1908년)·2,487명(1909년)·3,891명(1910년).

16. 『朝鮮總督府令第65號』(『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2월 29일); 田中市之助, 『조선대전발전지』, 4쪽. 회덕군 一道面の 尹秉奎, 外南面の 李廷錫 등도 1906년 대전군청의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도면회, 『근대의 대전』, 『대전역사의 爭點과 史實』(하권), 대전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9, 1514~1515쪽).

17. 송규진, 앞의 글, 206쪽.

18. 대전군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12개면(유천면·내남면·구죽면·북면·동면·유성면·탄동면·외남면·대전면·산내면·기성면·진잠면)으로 신설되었다(『朝鮮總督府忠清南道告示第13號』,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3월 26일). 대전면은 本町1丁目(현, 원동)·本町2丁目(현, 인동)·春日町1丁目(현, 중동)·春日町2丁目(현, 은행동)·榮町1丁目(현, 중동)으로 개편되었다. (『朝鮮總督府忠清南道告示第9號』, 『조선총독부관보』, 1914.3.16; 송인협, 앞의 글, 224쪽)

19.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 156~160쪽. 方里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넓이의 단위로 四方一里는 15.423km²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전은 0.082방리로 1.26km²에

이었을 뿐 일본인 중심의 개편이었던 것이다. 대전면이 신설된 것도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전발전지』의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대전발전지』에 의하면 대전군은 “대정3년(1914년;필자주) 3월 부군폐합(府郡廢合)의 결과 회덕군, 진잠군 및 공주군의 일부를 합하여 대전군(大田郡)으로 개칭(改稱)하였다”라고 하며 “대정3년 3월 군정유신(郡政維新) 당시 군폐합(郡廢合)의 결과 대전군으로 개칭하였다”라고 한다.²⁰ 이를 통해 보면 대전군의 군명(郡名)은 기존 군명에서 개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4년 군면폐합 당시 회덕군은 19개면, 진잠군은 5개면을 관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군은 회덕군을 기준으로 진잠군과 공주군의 일부를 병합했으나 군의 이름은 회덕군이 아니라 대전군으로 정한 것이다.²¹ 대전군은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대전면의 ‘대전’을 군이름으로 정했으며 일제가 대전면을 중심으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²² 회덕군청의 대전 이전은 이러한 지배체제 구축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대전지역의 변화는 대전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제강점 초기 대전면 거주자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대전면의 일본인은 1910년 한일강제병탄 전후 급속히 증가해 1910년대에는 일본인 비율이 80%를 상회하였다(〈표1〉 참조). 대전의 일본인들은 한말 1910년대 호남선철도유치운동(1908~1910년)·일본군연대유치운동(1911~1915년)·대전중학교설치청원(1916년)·대전금산간도로개수사업(1916년)·금강수력전기설치운동(1919년)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²³ 이런 활동의 기반에는 일본인 자치기관이 있었다.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을 조직했으며 대전의 일본인들도 1905년 11월 대전거류민회를 조직했다.²⁴ 대전거

해당한다.

20. 田中市之助, 앞의 책, 4·13쪽.

21. 송인협, 앞의 글, 212쪽.

22. 위의 글, 212~213쪽.

23.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송규진 논문(『일제강점 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참조.

24. 송규진, 앞의 글, 204쪽; 田中市之助, 앞의 책, 23쪽.

류민회는 일본인들의 공공비 징수,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설립, 도로와 교량신설, 신사건립 등 일본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²⁵

〈표 1〉 1910년대 대전군과 대전면 인구현황²⁶

연도	구분	대전군	대전면	비율	연도	구분	대전군	대전면	비율(%)
1911	조선인	53,525			1916	조선인	71,378	1,800	2.5%
1911	일본인	3,551	3,257	91.7%	1916	일본인	5,760	4,958	86%
1912	조선인	60,811			1917	조선인	72,985	1,813	2.4%
1912	일본인	3,718	3,274	88.0%	1917	일본인	5,898	5,080	86.1%
1913	조선인		1,642		1918	조선인	73,672	1,968	2.6%
1913	일본인		3,383		1918	일본인	6,533	5,372	82.2%
1914	조선인	66,584	1,556	2.3%	1919	조선인	74,563	2,015	2.7%
1914	일본인	4,112	3,435	83.5%	1919	일본인	6,368	5,260	82.6%
1915	조선인	69,534	1,619	2.3%	1920	조선인	74,243	1,963	2.6%
1915	일본인	4,993	4,360	87.3%	1920	일본인	5,239	4,164	79.4%

그러나 일제는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식민지 조선에서 자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거주 일본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단(民團)·민회(民會) 형태의 일본인 자치기관은 일제가 거류민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조직했으나 강제병탄 후에는 일본인들도 같은 제도 아래 통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자치기관을 해산하고 이들의 기능을 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 정책에 대해 재조일본인들은 반대했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조선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 문제였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단을 형성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대응은 저항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²⁷ 결국 조

25. 위의 책, 23~28쪽.

26. 〈표 1〉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근거로 작성했다. 대전군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시군도별 호구 및 인구」, 대전면은 「주요시가지호구」를 근거로 하였다. 1914년 대전군과 대전면 신설 이전의 통계는 대전군의 경우 회덕군과 진잠군의 인구를 합산한 것이며, 대전면의 통계는 회덕군 대전(대전리)의 통계이다. 〈표 1〉의 단위는 아니며 비율은 대전군 거주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전면 거주 인구비율이다. 「주요시가지호구」에 1911년과 1912년 회덕군 대전의 조선인 수는 29,532명과 33,96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반영하지 않았다.

27. 경성거류민회는 1912년 6월 일본인 위주의 자치제 존속을 요구했으며 같은 해 9월 전국의 11개 거류민회 대표들도 일본인들의 자치제도 존속을 조선총독·총리대신·척식국총재 등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손정목, 앞의 책, 134~136쪽).

선총독부는 1914년 4월 부제(府制)를 시행하면서 일본인 자치기관을 해산했으나 학교조합설립을 통해 일본인들의 특권을 유지시켰다.

재조일본인의 자치기관은 1914년 4월 부제가 실시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1911년 7월 일본인 자치기관의 해산을 결정한 상태였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지역의 자치기관부터 해산시켰다.²⁸ 이에 따라 대전거류민회도 1912년 3월 31일 해산되었고, 대전거류민회의 기능은 다음날 설립되는 대전학교조합으로 인계되었다.²⁹ 대전학교조합은 대전거류민회의 후신이었으며, 학교조합 관리자도 계속해서 대전거류민회 총대(總代) 구도 유지(工藤勇次)가 맡았다.³⁰ 대전학교조합은 명목상으로는 토목·교육·소방 등 대전거류민회의 기능 중 교육만을 승계했으나 설립 이후에도 대전교개축·본정교개축·하수구공사·도로개통 등 대전거류민회의 활동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다.³¹ 대전거류민회 마지막 총대 임기는 1912년 2월부터 1913년 11월까지였으며, 대전학교조합의 관리자도 대전거류민회 총대와 같이 대전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공사업의 중심에 있었다.³² 이는 대전학교조합 관리자로 대전거류민회의 총대가 유임된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대전거류민회가 대전학교조합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학교조합의 이런 성격은 평의원과 예산운영을 통해서 확인된다. 대전거류민회 존속기간(1905~1912년) 동안 평의원을 역임한 일본인은 27명이다. 이

28.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 26,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260~262쪽; 천지명, 「재한일본인 거류민단(1906~1916)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210쪽.

29. 田中市之助, 앞의 책, 28쪽. 『조선대전발전지』에 의하면 대전학교조합은 1912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朝鮮總督府告示第174號』에 의하면 대전학교조합은 1912년 3월 31일에 인가를 받았다(『조선총독부관보(479호)』, 1912년 4월 5일). 대전거류민회는 해산총회에서 대전학교조합을 설립했으나 설립일은 거류민회 해산 다음날인 4월 1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0. 『朝鮮總督府忠清南道告示第12號』(『조선총독부관보(492호)』, 1912.4.17); 田中市之助, 『조선대전발전지』, 28쪽. 대전거류민회의 歷代總代는 兒島岩太郎(1905.11~1906.06)·內藤氏熊(1906.07~1908.07)·工藤勇次(1908.07~1910.07)·渡邊寬治(1910.07~1911.09)·工藤勇次(1912.02~1913.11)이었다.

31. 田中市之助, 앞의 책, 29~30쪽.

32. 위의 책, 29쪽.

들 중 11명이 1917년까지 대전학교조합 평의원을 역임했다.³³ 대전학교조합은 대전거류민회가 토목·위생·소방 사업 등 자치활동을 벌였던 시기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1916년에는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³⁴ 예산만으로 한정하더라도 대전학교조합은 대전거류민회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은 대전학교조합 설립 후 토목·위생·소방사업 등은 별도의 조합을 조직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조합을 조직했으나 예산과 운영은 학교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보면 대전거류민회는 명칭만 학교조합으로 변경했을 뿐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914년 설립되는 공공회(公共會)가 주목된다. 『조선대전발전지』에 의하면 공공회는 “1914년 8~9월경부터 일본인의 교육사업 외에 토목·위생·소방 등의 공공사업을 당시까지 각 부문별로 분리된 조합을 통해 경영하고 있어서 이익도 없고 불편함만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위생조합은 해산하였다. 이에 공공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중략) 위세가지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경영하기로 결의하였고 (중략) 그 회명은 1915년 2월 협의회로 결정하였다”라고 한다.³⁵ 공공회(이하 대전협의회)의 조직이유는 토목·위생·소방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였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대전학교조합 설립 후 대전거류민회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1914년 다시 이러한 기능을 통합해 대전협의회를 설립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대전협의회가 설립된 시점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인 자치기관이 해산되고 학교조합이 설립된 것은 1914년 4월 부제 실시부터이다. 그런데 대전의 일본인들은 대전협의회를 조직했으며 회장도 대전학교

33. 고윤수, 「在朝日本人 쓰지킨노스케(辻謙之助)를 통해서 본 일제하 대전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 대전」, 88쪽; 田中市之助, 앞의 책, 29~33쪽.

34. 위의 글, 88~89쪽.

35. 田中市之助, 앞의 책, 31쪽. 공공회는 1914년 설립되었으나 1915년 2월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공식명칭은 협의회로 보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본고에서는 대전협의회로 서술했으며, 대전협의회는 공공회를 포함한 개념이다.

조합의 관리자인 시라이시 데쓰지로(白石鐵二郎)가 맡았다. 이를 통해 보면 대전협의회는 대전거류민회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부제 실시 이전 조선총독부 정책에 따라 대전학교조합을 설립했으나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 다시 자치기관을 재조직한 것이다. 대전협의회를 보면 대전의 일본인 사회가 조선총독부라는 국가권력에 제압되지 않고 자율적 조직과 논리를 갖고 있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³⁶ 이처럼 1904년부터 대전에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대전거류민회와 학교조합, 대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III. 『조선대전발전지』 편찬배경과 목적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배경은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 사회의 변화였다. 재조일본인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민족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 조선에서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배 민족이면서 식민지인이었고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은 조선인과 다른 특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했다. 재조일본인들은 지배민족으로서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에 협조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갈등을 빚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일본인 사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 지역현안 사업에는 타지역 일본인들과 경쟁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했다. 대전거류민회가 호남선철도 분기점과 일본군 보병80연대 유치운동을 전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조국은 일본이었으나 생활터전은 식민지 대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세력확장을 위해서 연대의식·공동체의식·지역단문의 형성이 필요했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이 대전의 일본인들에게만 요구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전은 경부선 철도 개통으로 형성된 근대도시였기 때문에 더욱 필요했고 이러한 방편의 일환으로 『조선대전발전지』를 편찬했던 것이다.

36. 고윤수, 앞의 글, 91쪽.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배경과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전지역 일본인 자기치관의 해산에 따른 대전거류민사(大田居留民史)의 정리이다.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대전발전지 간행의 목적은 대전의 실상을 알리고 그 진가를 자세하게 알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이는 지방지 편찬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실질적인 목적은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들의 활동을 선양하는데 있었다. 그가 부수적 목적으로 밝힌 “대전이 오늘같이 발전하는데 희생한 선배들의 업적을 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인 것이다.³⁷ 재조일본인들은 1914년 부제가 시행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한 지방지를 편찬했다.³⁸ 대전거류민회가 1912년 3월 『조선대전일반』을 편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대전거류민회는 1912년 3월 31일 해산되었다. 따라서 대전거류민회는 해산시점에 『조선대전일반』을 편찬해 자신들의 거류민사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대전의 일본인들은 1917년 지정면제(指定面制)가 시행되면서 지방지를 다시 편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7년 조선면제(朝鮮面制) 실시와 동시에 지정면제를 시행했다. 지정면제는 부(府)이하 일본인이 집중 거주하는 중소도시를 지정면으로 지정한 제도였다. 지정면은 일본인이 250호 이상 또는 일본인 비율이 30% 이상인 면을 대상으로 했다. 지정면에는 일본인 면장이 임명되고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등 보통면과 다른 특혜가 주어졌다.³⁹ 그런데 대전의 일본인들은 1917년 3월 대전협의회 해산명령을 받았다.⁴⁰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부제를 실시하면서 일본인 자치기관을 해산하고 이의 기능을 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전협의회와 같이 일본인들의 실질적인 자치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른지역의 검토와 대전협의회 해산명령 주체를 파악해야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조선면제를 시행하면서 일본인 자치기관을 다시 해산하려했고, 대전협의회 해산도 이러한 정책

37. 田中市之助, 「緒言」, 『조선대전발전지』.

38. 최혜주,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편찬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2011, 168~171쪽.

39. 손정목, 앞의 책, 164~170쪽.

40. 田中市之助, 앞의 책, 48쪽.

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의 일본인들은 1912년에 『조선대전 일반』을 편찬했음에도 5년 만에 다시 『조선대전발전지』를 편찬한 것이다.

둘째는 충남도청 이전 논의와 대전의 우월적 지위 확보이다. 충남도청의 이전은 1914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⁴¹ 충청남도 도장관(道長官) 박중양(朴重陽)은 “충청남도가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치(道治)의 중심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² 도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전의 일본인들은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충남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이 대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⁴³ 이러한 인식은 『조선대전발전지』의 「도청이전의 필요성(道廳移轉の要)」에 그대로 드러난다. 대전은 “남선(南鮮)에서 부산, 대구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교통이 편리하고 충남에서 식산과 공업, 상업이 가장 번창한 곳으로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이었다.⁴⁴ 「도청이전의 문제」는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보다는 공주가 도청소재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공주가 도청소재지로 부적합한 내용을 자세히 지적하고 “대전이 충남의 중앙행정 소재지로 유일한 후보지,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이 가장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⁴⁵ 이는 충남도청 이전의 진행과정과 관련이 있다. 충남도청 이전논의는 초대 도장관 박중양이 재임시에 시작되었으며, 『조선대전발전지』가 편찬되는 3대 도장관 간바야시 게이지로(上林敬次郎) 재임시기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고 한다.⁴⁶ 따라서 『조선대전발전지』에서 공주가 도청소재지

41. 安齋震堂, 『忠清南道發展史』, 467쪽;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十) 道廳移轉既往の沿革』, 『부산일보』, 1932.11.3.

42. 安齋震堂, 앞의 책, 46쪽.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충남도청 대전 이전을 논의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소요될 경비문제를 충청남도에 조회했고, 충청남도는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지수걸, 「도청의 설립과 이전」, 『충청남도지』 9,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8, 83쪽.

43. 위의 책, 46쪽.

44. 위의 책, 46~47쪽.

45. 田中市之助, 앞의 책, 139~140쪽.

46.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十) 道廳移轉既往の沿革』, 『부산일보』, 1932.11.3. 1910년대 충청남도 도장관은 다음과 같다. 제1대: 林重陽(1910.11.01.~1915.03.31), 제2대: 小原新三(1915.03.31~1916.10.28), 제3대: 上林敬次郎(1916.10.28~1918.09.23).

로서 부적합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충청남도청 이전지역이었다. 도청이전이 곧바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공주의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충청남도청의 이전은 예견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청 이전지는 충남의 교통중심인 도시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 도장관 간바야시 게이지로가 작성한 『조선대전발전지』의 「서(序)」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는 당시 도장관의 대전에 대한 인식과 『조선대전발전지』 편찬배경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바야시 게이지로는 “대전의 발전은 경탄할 일이나 대전의 미래에 당면할 상황을 고찰하면 북쪽으로 경성과 인천이 있고 남쪽으로 대구와 부산이 있다. 모두 오랜 세월 동안 기세와 위엄, 기반을 갖고 있어 갑자기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강경·조치원 등도 대전과 병립한 지역으로 지역간 우위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들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전 사람들 스스로가 대전을 알아야 하고 『조선대전발전지』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였다.⁴⁷

충청남도 도장관의 「서」는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1910년대 충남의 재조일본인들은 『강경사정(江景事情)』(1911년)·『논산발전사(論山發展史)』(1914년)·『鳥致院發展誌(조치원발전지)』(1915년)·『조선대전발전지』(1917년) 등의 지방지를 편찬했다.⁴⁸ 이들 중 도장관의 서문이 들어간 지방지는 『조선대전발전지』가 유일하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충남에서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도장관이 대전의 경쟁지역으로 언급한 곳이다. 도장관은 강경과 조치원을 경쟁지역으로 보았다. 조치원과 강경은 대전, 공주와 함께 1917년 지정면이 된 지역이다. 공주는 충남도청 소재지였고 대전·조치원·강경은 철도주변 도시로 지정면이 되었다.⁴⁹ 강경은 전통적 상권에 호남선 철도가 개통된 지역이고, 조

47. 上林敬次郎, 「서언」, 『조선대전발전지』.

48. 坂田富藏, 『最近江景事情』, 1911; 富村六郎編, 『論山發展史』, 1914; 酒井三洲編, 『鳥致院發展誌』, 1915.

49. 손정목, 앞의 책, 167쪽.

치원은 철도교통과 금강수운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러나 1910년대 대전의 실질적인 경쟁지역은 조치원이었다. 조치원은 도시 형성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도 대전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조치원은 작은 벽촌이었으나 1901년 경부선철도 측량대가 들어오면서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조치원의 일본인들은 1906년 5월 일본인거류민회를 조직했다.⁵⁰ 조치원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조치원리가 되었으며 1917년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지정면이 되었다. 조치원의 일본인들이 1911년 연기군청을 남면 연기리에서 조치원리로 이전한 것도 대전과 유사했다. 조치원의 이러한 변화도 경부선 철도 개통의 영향이었다. 조치원도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조치원은 주변 평야지대와 충북 내륙에서 생산된 물산이 집산되는 곳이었고, 이곳에 모여진 물산들은 철도와 금강벚길을 통해 외부로 반출되었다.⁵¹ 특히 조치원은 인근 평야지대에서 생산된 쌀의 집결지였으며, 조치원역은 집산된 쌀이 반출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대전은 조치원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 조건은 조치원이 유리해 보였다. 조치원은 충청남북도 도청소재지인 공주, 청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충북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조치원면의 신설과 지정면 지정은 이러한 조치원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지정면 지정 당시 대전면은 일본인 비율이 73%였으나 조치원면은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⁵² 조선총독부도 조치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치원의 일본인들은 이미 『조치원발전지』를 편찬했다. 『조치원발전지』는 1915년 일제가 식민지배 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에 조치원을 홍보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었다.⁵³ 대전이 똑같은 목적으로 1915년 1장짜리 절첩식 홍보물 「대전일반」을 제작한 것

50. 酒井三洲, 「發行スの主旨」, 『鳥致院發展誌』, 朝鮮新聞忠淸總支社, 1915, 77쪽.

51. 오석민·이도경, 『철도도시 조치원의 역사와 장소』, 15쪽.

52. 1917년 대전면에는 일본인 5,080명, 조선인 1,813명이 거주했으며, 조치원면에는 일본인 881명, 조선인 2,601명이 거주했다. (대전면은 <표 1> 참조, 조치원면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인구편 「주요시가 지호구」 참조)

53. 酒井三洲, 앞의 책, 1쪽.

과는 대조적이었다.⁵⁴ 『조치원발전지』의 핵심은 ‘조치원이 교통의 요지, 상업의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조치원은 1917년 충북선의 기점을 유치하기도 했다. 충북선은 조치원과 충주를 잇는 사설철도였다. 충북선의 기점을 두고 조치원과 충북의 부강은 경쟁을 벌였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대전역을 기점으로 하고 부강을 분기점으로 충북선이 건설되기를 원했고 충북선기점 유치운동이 벌어질 때 부강을 지원했다.⁵⁵ 그러나 충북선의 기점은 조치원으로 결정되었고, 조치원은 1910년대 근대도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었다. 『조치원발전지』는 충남도청 이전논의가 진행되던 1915년에 발행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조치원발전지』의 편찬도 충남도청 이전을 염두에 두었음은 미루어 짐작된다. 실제로 조치원은 1932년 충남도청 대전이전 당시 대전·천안과 함께 유치운동을 벌였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조치원은 기성회를 조직해 진정과 로비활동을 전개했는데, 충청남북도를 병합해 그 중심지인 조치원에 충남도청을 이전하면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⁵⁶

대전은 철도의 개통으로 형성된 근대도시였고 충남도청 이전의 조건은 ‘교통의 편리’였다. 그런데 조치원뿐만 아니라 1911년 호남선의 대전-강경노선이 완공되면서 강경과 논산 등도 근대도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전은 이들 도시들과 경쟁이 불가피했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이미 호남선철도 분기점, 일본군 보병80연대 유치문제로 조치원, 대구와 경쟁한 바 있다. 호남선철도 분기점은 유치할 수 있었으나 보병80연대 유치는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보병80연대 유치의 실패는 대전의 일본인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1915년 보병80연대 부지 20만평을 마련하고 일본정계와 군부, 조선총독부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연대본부는 대구에 설치되고 대전에는 대대병력이 주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⁵⁷ 대전은 대구와 경쟁이

54. 고윤수, 「大田一斑」해제, 『대전근대사연구초』2, 대전광역시, 2012, 72쪽.

55.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五) 五州鐵道と忠北線』, 『釜山日報』, 1932.10.29.

56. 지수길, 앞의 글, 102쪽, 105쪽.

57. 일본의 제국의회가 1915년 조선군을 2개 사단으로 증설하는 안을 통과시키자 조선의 각지에서는 위수지 유치전이 벌어졌다. 대전은 대구와 일본군 보병80연대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유치를 낙관했다. 대전은 삼남지방의 중심으로 지리적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했으며, 이미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보병80연대 유치 실패 후 대전의 세력을 확장해 궁극적으로는 충청도청의 대전이전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⁵⁸ 따라서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은 조치원을 비롯한 인근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충청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대전 일본인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IV. 『조선대전발전지』의 구성과 성격

『조선대전발전지』는 일본인 다나카 이치노스케가 편찬했다. 그는 『조선민보』 기자로 1914년 7월부터 조선민보 호남총지사 책임을 맡으면서 대전에 거주했고, 1915년 조선민보사에서 퇴사했다. 그의 조선민보사 퇴사는 보병80연대 유치문제 때문이었다. 조선민보사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 보병80연대 유치문제가 대두되면서 『조선민보』의 구독율이 떨어졌고 호남총지사는 경연년에 봉착했다.⁵⁹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대구의 밀정으로 오해를 받기에 이르렀고 조선민보사를 퇴사했다.⁶⁰ 그의 출생 및 일본에서의 행적은 파악되지 않으나 언론인으로서 상공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조선민보사를 퇴사한 후 대전에서 『대전상공보(大田商工報)』를 발행했으며⁶¹ 『조선대전발전지』 외에도 『충남산업지(忠南産業誌)』(1921년)·『전선상공회의소발달사(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1936년)·『신흥조선개발사정(新興朝鮮開發事情)』(1939년) 등을 편찬했기 때문이다.⁶²

그러나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은 대전실업협회가 기획한 것으로 보아야

2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병80연대 본부는 대구로 결정되었고, 대전에는 대대병력이 주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송규진, 앞의 글, 213~216쪽).

58.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一) 道廳移轉式に列して」, 『부산일보』, 1932.10. 21;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五) 大田實業協會創設」, 『부산일보』, 1932.10.28.

59. 이토마사히코, 「新興大田の回顧」해제, 『大田近代史研究草』 2, 대전광역시, 2012, 94쪽.

60.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五) 大田商工機關の濫觴」, 『부산일보』, 1932.10.29.

61.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五) 大田商工機關の濫觴」, 『부산일보』, 1932.10.29. 다나카 이치노스케(田中市之助)는 1923년 부산일보사에 입사하면서 대전을 떠났다.

62. 田中市之助, 『忠南産業誌』, 大田實業協會, 1921; 田中市之助, 『(始政廿五年記念)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1936; 田中市之助, 『新興朝鮮開發事情』, 朝鮮民報社, 1939.

한다. 대전실업협회는 대전지역 실업인 120여명이 참여한 대전지역 최대의 상공인 조직이었다.⁶³ 대전실업협회의 전신은 1909년 설립된 대전상업조합이었다.⁶⁴ 그런데 일본군 보병8연대 유치실패를 계기로 대전 상공업발전을 위해 대전상업조합을 대신할 기관 설립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16년 7월 대전실업협회가 설립되었다.⁶⁵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조선대전발전지』 편찬 당시 대전실업협회의 서기장(書記長)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⁶⁶ 대전실업협회가 1921년 발행한 『충남산업지』의 편찬자도 다나카 이치노스케였다.⁶⁷ 『조선대전발전지』에 충청남도 도장관의 「서」, 충청남도 전도장관(前道長官)과 조선총독부 상공부장관의 제자(題字)를 수록할 수 있었던 것도 대전실업협회의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 다나카 이치노스케 개인의 지위와 능력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수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면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지역 일본인, 특히 상공인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대전발전지』는 한말 1910년대 대전의 변화와 일본인사회 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편찬자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서언(緒言)」에서 실증에 충실했음을 밝히고 있다. 편찬자료는 “대전의 관공서와 공공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조사통계에는 정확함을 기했으며 기사를 취할 때는 주의를 기울였다” 라고 한다.⁶⁸ 더욱이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1915년 「대전일반」을 편찬했다.⁶⁹ 비록 절첩식 홍보물이었으나 대전과 관련된 자료들은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12년에 편찬된 『조선대전일반』과 「대전일반」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자료를 수집해 『조선대전발전지』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63. 田中市之助, 『조선대전발전지』, 103쪽.

64. 위의 책, 103쪽.

65. 위의 책, 103쪽;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五) 大田實業協會創設」, 『부산일보』, 1932.10.28.

66. 田中市之助, 앞의 책, 103쪽; 田中麗水, 「新興大田の回顧(五) 大田實業協會創設」, 『부산일보』, 1932.10.28.

67. 『충남산업지』는 1921년 12월 발행되었다. 『충남산업지』의 편찬 및 발행인은 (麗水)田中市之助였으며, 발행소는 대전실업협회였다(田中市之助編, 『忠南産業誌』, 大田實業協會, 1921).

68. 田中市之助, 「緒言」, 『조선대전발전지』.

69. 고윤수, 「大田一斑」해제, 『대전근대사연구』 2, 72~75쪽.

『조선대전발전지』의 전반부는 도장관의 「서」·전도장관의 제자·전현직도장관과 충청남도각부장(忠淸南道各部長)의 사진·화보·「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는 전직도장관인 오히라 신조(小原新三)와 박중양이 작성했다. 오히라 신조는 “지지리불여인지화(地之利不如人之和)”, 박중양은 “득지리인화연후가성지(得地利人和然後可成之)”라 썼다. 오히라 신조는 충청남도 2대 도장관이었으며, 『조선대전발전지』 편찬시에는 조선총독부 상공부장관이었다.⁷⁰ 그는 충청남도 도장관시절 『조치원발전지』에 “지지리인지화(地之利人之和)”라는 제자를 한바 있다. 고전을 인용해 일상적인 문구를 써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선대전발전지』에서는 지리보다 인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중양은 충청남도 초대 도장관으로 충남도청 이전을 추진했었다. 그의 문구는 ‘지리의 이점과 인화를 통해 충남도청 이전을 달성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일반적인 제자를 확대 해석한 측면도 있으나 충남의 전직도장관과 상공부장관이 제자를 하고 대전의 지리적 특성과 인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조선대전발전지』의 특징 중 하나는 전반부에 삽입된 화보이다. 『조선대전발전지』의 화보는 2장에 4컷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지 편찬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 홍보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발행된 지방지들은 대체로 전반부에 많은 화보를 수록했다. 지역 발전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대전발전지』의 화보는 상당히 빈약하다. 물론 본문에 사진들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화보는 빈약함을 넘어 조잡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집필기간과 편집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이 급하게 기획되고 발행되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본문은 총 14장 33절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행정 및 사법기관, 자치기관, 교육·신사·종교·신문, 위생소방, 교통·운수·통신, 상공업·금융, 농산업, 은행회사, 모임단체, 유람안내, 대전의 기왕의 문제, 대전장래의 문제, 잡록 등 한말 1910년대 대전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조선대전발전지』의 목차 및

70.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직원록』.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설(대전의 위치와 지세·대전의 기후·대전의 연혁·대전의 시가·대전의 호구)
- 제2장 행정 및 사법기관(행정·사법)
- 제3장 자치기관(거류민회 시대·학교조합)
- 제4장 교육, 신사, 종교 및 신문(교육·신사, 종교·신문)
- 제5장 위생, 소방(위생·소방)
- 제6장 교통, 운수, 통신(교통과 교통기관·운수·통신)
- 제7장 상공업, 금융(무역 상황·상업·공업)
- 제8장 농산업(대전 부근 일대의 농업 개황·과수 재배 및 종묘 채소 생산 상황·양잠 기타 산업·대전 부근 농업인 호구수 및 생산액·대전 부근 영농인의 투자)
- 제9장 은행, 회사(은행·회사)
- 제10장 모임·단체(실업단체 및 기타 조합·공공 및 사교단체)
- 제11장 유람 안내(여관, 요리점, 오락장·유성온천·명승, 고적)
- 제12장 대전 기왕의 문제
- 제13장 대전 장래의 문제
- 제14장 잡록
- 부록·대전 거주 일본인 유명 영업소 안내

본문의 구성은 크게 보면, 대전의 일본인 거류민사·대전의 산업·대전의 문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큰 비중은 대전의 산업에 두었다. 이는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배경과 목적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워 보인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대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전의 발전된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강조해야 했다. 대전실업협회와 관계를 고려하면 산업부분 강조는 당연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점이 『조선대전발전지』만의 특성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사·관찬지(私·官撰誌) 대부분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식민지배를 통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조선대전발전지』도 1910년대 편찬되었지만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대전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전거류민사는 산업에 버금가는 지면을 할애했다. 『조선대전발전지』를

‘대전일본인거류민사(大田日本人居留民史)’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살펴보았듯이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목적은 “대전이 오늘같이 발전하는 데 희생한 선배들의 업적을 전하는 것”이었다. 『조선대전발전지』에서 일본인들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이유이다. 대전의 연혁, 행정·사업기관, 자치기관, 교육·종교·신사·신문, 대전의 문제 등의 내용들도 대부분 일본인들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다.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2년 전 편찬한 「대전일반」에서도 ‘대전의 연혁·발전의 경로·상업의 상태·공업의 유망·농업 및 토지·금융의 상황’을 ‘대전의 발달사(大田の發達史)’로 분류하였다.⁷¹ 제14장 잡록에서 대전에 정착한 후 일본인들이 대전발전에 기여한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것도 이러한 의도였다.

『조선대전발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의 문제’가 수록된 것이다. 대전의 문제는 ‘대전기왕의 문제(大田既往の問題, 12장)·대전장래의 문제(大田將來の問題, 13장)’로 구성되었다. 대전기왕의 문제는 ‘대전의 군영문제(大田と軍營問題)·호남철도분기점문제(湖南鐵道分歧點問題)·군청이전문제(郡衙移轉問題)·금산도로 및 개수문제(錦山道路及改修問題)·매립지문제(埋立地問題)·대동천개수문제(大東川改修問題)·중학교설치문제(中學校設置問題)’로 편찬되었다. 그런데 대전기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대전거류민들의 ‘개척사(開拓史)·분투사(奮鬪史)’이다. 대전의 여러 문제들을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이다. 일본군 보병80연대 유치문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유치운동 당시 활동했던 일본인들의 투쟁을 상세히 기록한 것도 ‘대전발전을 위한 일본인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대전기왕의 문제는 대전의 일본인거류민사와 함께 한말 일제강점 초기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전장래의 문제는 ‘도청이전의 필요성(道廳移轉の要)·대전수도시설의 필요성(大田に水道施設の要)·금강수력전기의 기획(錦江水力電氣の企劃)·산업진흥책(産業振興策)·공업진흥책(工業振興策)·상권의 확장(商領域の擴張)’으로 편찬되었다. 장래의 문제는 대전이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71. 田中市之助, 「大田一斑」, 1915 (대전시립박물관소장).

발전계획이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의 개설과 공업발전을 위한 전기 문제 해결,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장래 문제의 핵심은 ‘도청이전문제’이다. 살펴보면『조선대전발전지』는 충남도청 대전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도청이전문제는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본문 다음에는 「대전저명영업안내(大田著名營業案内)」와 광고가 수록되어 있다. 「대전저명영업안내」는 대전지역의 상공업의 종류와 위치·상호명·전화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50여 개의 광고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실업협회와 관계가 깊었다. 따라서 대전지역 상공업과 관련된 안내를 수록한 것으로 보이며, 광고를 통해 편찬비용의 일부를 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대전발전지』의 성격은 서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대전발전지』의 주제어는 ‘대전’과 ‘발전’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서명 자체가 이러한 성격을 보인다. 『조선대전발전지』 이용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생활했던 공간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이 거주했던 지역은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 대전은 이러한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대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이고, 그들의 표현대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도 있다. 중요한 점은 대전과 대전지역에도 조선인들이 거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대전발전지』에는 조선인이 없다. 조선인의 교육과 종교 등에서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다.

『조선대전발전지』는 한말 1910년대 대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자는 일본인이었고 서술대상도 대전지역의 일본인이었다. 『조선대전발전지』가 편찬되던 1917년 대전지역의 일본인은 5,898명, 조선인은 72,985명이었음에도 조선인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표1〉참조). 따라서 『조선대전발전지』는 이러한 인식하에 접근해야 한다. 『조선대전발전지』는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이 ‘일본인의 도시’라는 의미로 편찬된 지방지로 보아야 한다.

대전지역은 ‘철도개통으로 발전한 신흥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고 대전역 주변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근대도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일제강점기 대전면으로 한정된 개념이며 대전읍과 대전부로 확대한다해도 큰 차이는 없다. 이는 일제강점기 대전군 전체의 성격도 아니며 현재 대전광역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대전지역은 호서유림의 근거지이기도 했고, 독립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미보다 ‘신흥도시·식민도시’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었으며 『조선대전발전지』는 이러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지방지이다.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거주 일본인들이 상호결속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따라서 대전발전의 주체는 일본인이었고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물론 『조선대전발전지』만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편찬한 지방지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편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대전발전지』는 1910년대 편찬된 지방지임에도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는 『조선대전발전지』의 시기구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대전발전지』는 1904년부터 일제강점 초기를 ‘창시시대(創始時代)·창설시대(創設時代)’로 규정했다.⁷² 일본인들이 한적한 시골에 이주해서 대전을 창조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은 1921년 다나카 이치노스케가 편찬하고 대전실업협회가 발행한 『충남산업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남산업지』에는 대전을 ‘건설시대(建設時代)·정비시대(整備時代)·완성시대(完成時代)’로 구분하였다.⁷³ 결국 일본인들은 대전으로 이주해 대전을 창시하고 완성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자신들은 대전의 개척자로서 식민지 조선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에게 대전의 역사는 대전면의 역사였다.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대전발전지를 편찬함에도 대전군과 대전면을 구분했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대전면은 ‘대전면·대전’, 이외의 지역은 ‘대전군·대전부근’

72. 田中市之助, 앞의 책, 30쪽, 151쪽.

73. 田中市之助, 『충남산업지』, 7~10쪽.

으로 구분해 서술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면지(大田面誌)·대전면일본인사(大田面日本人史)’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조선대전발전지』를 이용할 때 ‘대전군과 대전면, 대전군과 대전’을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다나가 이치노스케에게 대전의 조선인들은 ‘타자’였고,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지역 조선인들에 대한 ‘배제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대전발전지』에서 대전의 조선인들은 ‘신부동포(新附同胞)’였고 ‘신국민(新國民)’으로 양성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⁷⁴ 『조선대전발전지』에서 이런 인식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전의 조선인 기풍에 대해서 “풍속은 대개 거칠어서 미풍양속으로 인식할 만한 특징은 없다. 다만 산간벽지의 주민에 비하여 신개척지로서 문명풍속을 접하고 어느 정도 지능과 동작이 진보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이다.⁷⁵ 대전의 조선인들은 미개했으나 일본문명의 혜택을 받아 지능이 진보하고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다나가 이치노스케는 일본인이 우월적 민족이라는 점과 식민지근대화론 관점에서 대전지역 조선인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게 조선인은 “기이한 흰옷을 입은 존재”일 뿐이었다.⁷⁶ 물론 이러한 인식은 편찬자 다나가 이치노스케만의 인식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에 대전실업협회가 관계한 점을 고려하면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인식으로 보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조선대전발전지』는 한말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역사와 소위 업적을 정리한 것이다.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활동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인 것이며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대전개척사인 것이다. 따라서 대전이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임을 증명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조선대전발전지』에 수록된 개량화된 지표들은 이를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객관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대전이 일본인들에 의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전발전지』의 후반부 「대전저명영업안

74. 田中市之助, 『조선대전발전지』, 41쪽.

75. 위의 책, 158쪽.

76. 위의 책, 68쪽.

내』와 광고에 조선인의 회사와 상점은 찾아 볼 수 없다. 일본인들의 회사와 상점만 수록했을 수도 있으나 조선인의 회사와 상점이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1910년대 대전이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수탈지역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1910년대 대전의 일본인들에게 대전지역은 “순박·순진하며 충실·근면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임금의 조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일 뿐이었고⁷⁷ 이러한 인식들을 정리한 것이 『조선대전발전지』이다.

V. 맺음말

『조선대전발전지』는 1917년 12월 대전에 거주했던 일본인 다나가 이치노스케가 편찬한 대전지방지이다. 식민지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지방지(사)로 편찬했는데 『조선대전발전지』도 이러한 지방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조선대전발전지』가 주목되는 이유는 한말 1910년대 대전지역 일본인의 동향과 도시형성과정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전발전지』의 편찬배경은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 사회의 변화에 있었다. 대전의 일본인은 지배민족이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가는 지역민이었다. 재조일본인은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에 협조하면서 자신들만의 이권을 지켜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대전의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지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대전거주 일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은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새롭게 근대 도시로 부상한 지역이었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전통적인 도시의 일본인들과는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만의 담론형성과 대전의식이 필요했고 『조선대전발전지』는 이러한 성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1910년대 격변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자치기관인 대전거류민회가 해산되었고, 일본군 보병80연대의 유치, 충남도청 이전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대전거류민회는 1905년 설립된 일본인 자치기관이었다. 그런

77. 田中市之助, 앞의 책, 144쪽.

데 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일본인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전거류민회는 1912년 해산되었고 대전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거류민사를 『조선대전일반』으로 편찬했다. 대전거류민회의 기능은 대전학교조합으로 승계되었으나 대전의 일본인들은 1914년 대전협의회를 조직해 대전거류민회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대전협의회는 1917년 조선면제가 시행되면서 해산명령을 받았고, 다시 『조선대전발전지』를 편찬했다.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일본군 보병80연대의 유치였다. 대전의 일본인들은 보병연대를 유치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보병80연대 유치실패는 대전의 일본인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이는 대전 일본인사회 존망(存亡)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시기는 충남도청 이전이 논의되던 시기였다. 충청남도 도장관 박중양이 '충남도청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의 일본인들은 도청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대전이 충남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라 여기고 있었고 충남도청의 유치는 충남의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인근 조치원이 경쟁상대로 부각되었다. 조치원은 대전과 도시형성 과정, 일본인들의 거주형태, 지리적 환경이 대전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조치원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전이 충남의 어떤 지역보다 이전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도청소재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결속과 단합, 그리고 자신들만의 대전담론을 형성해야 했다. 결국 대전의 일본인들은 궁극적으로 충남도청 대전이전을 목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선대전발전지』를 편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대전발전지』의 주체는 대전거주 일본인이었다. 편찬자도 일본인이었고 서술대상도 대전지역의 일본인이었다. 그렇다 보니 『조선대전발전지』에서 대전지역 조선인은 배제되었다. 『조선대전발전지』에서 조선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전은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신흥도시·식민도시'라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편찬자 다나카 이치노스케는 대전의 역사를 기술함에도

대전군과 일본인들의 거주지인 대전면을 구분해서 서술했다. 『조선대전발전지』에서 대전지역의 역사는 대전면과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역사였고,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면지·대전일본인의 역사’의 성격을 갖는다. 편찬자 다나카 이치노스케에게 대전지역의 조선인들은 ‘타자’였고,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지역 조선인에 대한 ‘배제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대전발전지』는 한말 1910년대 대전거주 일본인들의 역사와 소위 업적을 정리한 것이다. 결국 『조선대전발전지』는 대전이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임을 증명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 安齋霞堂編, 『忠清南道發展史』, 湖南日報社, 1932.
- 櫻井義之編, 『朝鮮研究文獻誌』, 書物同好會, 1941.
- 田中市之助編, 『(始政廿五年記念)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1936.
- 田中市之助編, 『大田發展誌』, 瞬報社, 1917.
- 田中市之助編, 『忠南産業誌』, 大田實業協會, 1921.
- 酒井三洲編, 『鳥致院發展誌』, 朝鮮新聞忠清總支社, 1915.
- 『釜山日報』
- 고윤수, 「일제하 대전의 한국인 유지들의 등장과 변화」, 『역사와 담론』 91, 호서사학회, 2019, 139~177쪽.
- _____, 「일제하 유성운천의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225~262쪽.
- _____, 「재조일본인 쓰지긴노스케(辻謹之助)를 통해서 본 일제하 대전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 대전」, 『서강인문논총』 5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67~105쪽.
- 김나아, 「1930~1931년 대전기성회의 충남도청 유치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119~150쪽.
- 대전광역시, 『대전근대사연구초』 1·2·3, 2012·2013·2014.
-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 26,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241~272쪽.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 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
- 송규진, 「일제강점 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4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201~225쪽.
- _____, 「일제강점기 충남도청 유치 이후 대전 발전의 한계」, 『한국사학보』 74, 고려사학회, 2019, 347~373쪽.
- 송인협, 「일제강점기 대전지방 행정구역 변천」, 『대전문화』 18, 대전시사편찬위원회, 2009, 205~237쪽.
- 오석민·이도정, 『철도도시 조치원의 역사와 장소』, 세종시·국립민속박물관, 2016.

지수걸, 「도청의 설립과 이전」, 『충청남도지』 9,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8, 81~110쪽.

최혜주,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편찬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2011, 161~207쪽.

Abstract

The Trend of Japanese Local Community and Publication of “ChosunDaejeonBaljeonji” at Daejeon in 1910s”

Lee, Sung-w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The “ChosunDaejeonBaljeonji” was an local magazine published by Danakzichinoske in 1917 and a source to understand trend of Japanese Local Community and formation of the Daejeon city in 1910s. Japanese begun to reside at Daejeon from 1904, and they organized a establish selfgovernment organization, but it was disorganized in 1910. After being disorganized the selfgovernment organization, the Japanese at Daejeon published the “ChosunDaejeonBaljeonji” to record their history.

The “ChosunDaejeonBaljeonji” was published not only for formation of group spirit, community spirit, and regional discussion but also for relocation of the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o Daejeon. The “ChosunDaejeonBaljeonji” however, was recorded the history of the Japanese at Daejeon in terms of the Colonial Modernity, and tried to rationalize the Japanese colonization.

Keywords: Daejeon, ChosunDaejeonBaljeonji, History of the Daejoengeoryuminhoe, Daejoengeoryu minhoe, Daejeon town,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논문 투고일 : 2020년 10월 05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10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0월 28일
--